

생존에 몸부림 치는 여수산단, ‘화약고’ 불명예 탈피 할까

100조 실적에 10조 세금 납부 산단인데도 매년 인명피해 발생
 민관협력 거버넌스 ‘호지부지’... ‘이젠 국가가 나서라’ 목소리 커

국내 최대 중화학공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 단지가 한해 100조에 달하는 실적에도 각종 안전사고로 여전히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해가 시작되면서 공장 신·증설 등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반백 년 가저운 ‘화약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만 4000여 명이 일하는 여수산단의 2021년 매출액은 77조 955억 원, 수출액 39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액은 2020년 111억 원, 2021년 1238억 원이며, 2020년 7조 3429억 원, 2021년 9조 674억 원을 국세로 납부했다.

협력업체 수가 4331개로 협력업체 등을 통한 연간 외부 작업자는 208만 700여 명에 이른다.

이같이 나라 살림살이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여수국가산단은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십 년째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12월 연 매출 800억 원대 중견 화학물 제조사인 이일산업㈜에서 유류 저장 탱크 정비 작업 중 폭발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개월 뒤인 2월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정비 후 최종 압력을 시험하던 중 지름 2.5m 상당의 덮개가 튀겨 나가면서 4명이 숨

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외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어도 화재, 폭발음, 유독가스 누출 등 크고 작은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공장관계자와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산단업체가 해마다 심혈을 기울인 사회공헌 사업도 사고 발생 한차례로 시민의 기억 속에서 멀어질까 정도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산재 예방 민관합동 감시센터 상시 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안전 정책 마련 등 예방책이 나열되지만, 피부와 와 닿을 정도의 대안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배출가스 대책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수차례 난상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던지 못한 상태로 해를 넘기면서 상실감만 키웠다.

설립 반백 년이 넘는 노후 산단인 여수국가산단은 산업화의 기수로 내수와 수출을 통해 국가 성장세를 이끌었으나, 정작 여수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는 폭탄을 안고 사는 처지가 여러 해 지속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온실가스 감축 등 한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여수산단의 대개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우려되는 것은 여수국가산단의 스마트 공장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0월 국회의원실이 내놓은 스마트 산단 보급률 관련 자료는 전국 입주업체 3만 5291개 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 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의 보급률이 각각 평균 보급률을 밑돌았다.

전국 7개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 중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이 스마트 공장보급률이 평균에 달하지 못했으며, 이중 여

수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밑바닥이었다.

여수시는 올해 국가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건 5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260억 원,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 구축사업 79억 원,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여수산단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 45억 원, 여수 산단 재난 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 7억 원 등을 추진한다.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산단 자격으로 지

난 50여 년간 나라 살림살이 한 축을 담당해온 여수국가산단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노후화를 벗어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정유와 화학공장이 주축인 여수국가산단은 공장별 노후화 진척도 달라 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주도의 산단 대개조가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민관학이 협업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중국발 입국자 분류되는 인천국제공항

(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

尹정부 ‘양도세 추가 완화’ 검토... “거래활성화 제한적” 전망

단기·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완화 검토
 주택 의무 보유 기간 2년→1년으로 축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증과체계를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증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5월9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9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증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는 제외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증과세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단기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역대급 ‘거래 가뭄’이 빚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9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559건)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지난 7월 639건으로 떨어진 이후 5개월째 1000건을 밑돌고 있다.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7.22%를 기록했다. 서울도 7.20% 하락하면서 2021년 누적 상승분(6.58%)을 거의 다 반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세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일부 지역의 급매물 거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올해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여전히 거래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이슬기자

동계휴가로 다음호 9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